

이낙연, 텃밭 호남서 지지율 회복하나... '아특별법·신복지' 눈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텃밭인 호남에서조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뒤처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돌파 구 마련을 위한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국회 대표연설서 이례적 지역 현안 법안 언급 신복지제도 발표 후 이 지사 기본소득 견제구 “앞으로 달라진 모습” 설 밥상 민심 향배 관심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대표가 설 밥상 민심을 휘어잡고 텃밭 지지율을 회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역의 현안 법안을 이례적으로 거론하는가 하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이낙연표' 신복지제도를 제시하는 등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정책적 차별화와 함께 지지세력 결집을 통해 추락하고 있는 지지율 반등을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이 대표는 전남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광주의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범 문제를 거론해 주목을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별법) 처리를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자신의 대표 재직 기간 국회를 통과한 '5·18 역사왜곡처벌법' 등 각종 법안 성과를 설명하면서 “남은 과제가 아직도 많다”며 “우리(여야)는 국가와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며 역사의 진전을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큰 보람을 얻었다. 아특별 등을 기다리는 국민들이 많다”고 밝혔다.

아특별은 공공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조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이 대표의 비중있는 언급에 따라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쏠렸다는 평가다.

'이낙연표' 신복지제도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면서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복지제도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 소득'에 맞서는 승부수로 보인다. 이 대표는 연설 직후 이 지사와의 차별화를 위한 목소리도 냈다. 이 지사

의 기본소득론에 대해 “알래스카 빼고 하는 곳이 없다”며 견제를 날렸다.

이 대표는 또 4차 재난지원금도 선별·보편 지급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 연설은 그동안 이 대표의 조심스런 행보 및 발언과 대조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전직 대통령 사면론 주장에 대한 역풍과, 이재명 지사에 비해 쫓겨나고 있는 행보를 지적받으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번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행보로 승부수를 띄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남 지역 정가의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보니 너무 조심스런 행보와 함께, 발언 수위도 높지 않았지만, 이번 대표 연설은 '이

낙연표'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구상과 함께, 지역적 배려도 들어가는 등 달라진 모습이 역력하다”면서 “설 전후로 이 대표가 지역을 방문한다면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광주지역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그동안 대권주자의 면모 보다는 당대표에 치중하다 보니 소극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대표 연설을 기점으로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달라진 이 대표가 설 민심 밥상을 타고 텃밭인 호남 지지율을 다시 회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최근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전국은 물론, 호남지역 지지율에서 뒤진 상황이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野, 北원전 의혹 파상 공세...국정조사 요구서·특위 가동

김종인 “정부여당, 거짓 덮으려다 거짓 늘고 있어”
김미애 “국회 정보위에서 여야가 동시에 열람하자”
주호영 “文, 진실 밝히고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야”

국민의힘은 3일 예정에 없던 비상대책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공세를 이어갔다. 진상규명특별위원회도 가동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와대를 비롯해 여권 인사들이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이 터무니없는 북풍이니,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했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을 덮으려다 거짓이 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진상특위 가동 등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부) 공개된 문서에는 한남 신포의 신형 원전인 'APR1400' 건설은 물론 송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담겼다”며 “핵무기 재료가 될 수 있는 원전을 우리나라에서는 폐기하자고 하더니, 북한에는 새로 지어주는 안보상의 계획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 “현재 공개된 사건을 시간 순으로 나열만 해도 전체 퍼즐 윤곽이 드러난다”며 “2018년 5월1일자로 통일부는 비공개 업무 협의 개최 공문을 다수 발송한다. 문제의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은 다음날인 2일부터 15일까지 작성된다. 5월 김정은은 건설 도중 폐기된 신포 경수로 시설을 점검한다. 26일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2019년 1월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원전 활용을 강조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모두 우연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부 검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의 자료였다면 공무원들이 인생을 건 범죄 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건설에만 수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120조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실무 공무원이 습작품으로 문서로 만들었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우리 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응해주기 바란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 베리나 경제 문제

가 아닌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여야 의원이 함께 관련 문건을 열람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미애 비대위원장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당시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원전 문제를 거론 하지 않고 미국과도 상황 공유했다고 진화에 나섰다”며 “말 그대로 USB에 대북 원전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것을 국회 정보위에서 여야가 동시에 열람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 원전 건설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다. 사실 왜곡을 멈춰 진실을 밝히고, 허망한 대북환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요구서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수송 모의훈련에서 백신 수송 훈련 참가군인과 경찰을 격려하고 있다.

김희재, 부산 소녀상 도로 무상점용 가능 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은 2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의 도로점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안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희재 의원은 “도로에 위안부 기념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 점용

료 감면기준이 없어 위안부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위안부 피해자법이 개정되면, 도로를 점용한 위안부 기념물들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